

광주 서구형 '스마트돌봄' 전국으로 확산

김이강 서구청장 성공사례 발표 재택의료센터·방문 의료서비스 복지부 "통합돌봄 추진 큰 도움"

광주 서구가 시행한 의료·돌봄 통합정책이 정부로부터 성공사례로 평가받으면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서구에 따르면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에서 지난 5년간 서구가 추진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돌봄 정책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는 전문가들과 지자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이강 청장은 "서구의 통합돌봄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서 출발했다"며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며 의료와 돌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하고 의료진들과 긴밀한 협업 시

스템을 구축해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서구는 스마트돌봄정보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안부확인 및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등을 24시간 인공지능(AI) 기반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김 청장은 "서구에서 5년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선도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 같은 정책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미 서구의 성공사례를 토대

로 광주시 5개 자치구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면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으로도 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서구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조직을 구성해 복지, 간호, 행정, 전산직 등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면서 협업의 모델을 만들었다"며 "서구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가 전국 지자체별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과 자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비 기자 jubu.kang@nibbo.com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서구, 안전사고 사례·예방대책

광주 서구는 지난 25일 상무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능력 향상, 기능 습득 지원 등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은 자활사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참여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복지도우미, 희망지킴이, 근로유지형 등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활사업 참여자들로 구청과 동 사회 복지 업무보조, 통합돌봄 대상자 안부 확인, 지역환경정비 등 다양한 일선 현장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서구는 이날 이유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강사를 초청해 △안전사고 사례 △사고예방 대책 △근로자 건강관리 요령 등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광주비 기자

청년 창업가 점포 임대료 지원 서구, 8개월 동안 최대 400만원

광주 서구가 청년 창업가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구는 청년 창업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서구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8개월 동안 임대료 최대 400만원(매달 최대 50만원),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5월8일까지 대상자 11명을 모집 중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4월25일) 기준 19~39세 이하의 청년, 2017년 4월25일 이후 관내에 창업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창업가다. 단,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며 청년 초기창업가여야 한다.

신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masterke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미 서구 일자리청년지원과장은 "임대료 부담으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청년 창업가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아이코노미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비 기자



광주 동구는 지난 25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4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을 열었다

광주 동구 제공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

광주 동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4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무보수·명예직의 인적 안전망이다. 현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 594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

은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등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13개 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전달, 결의문 낭독,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역량강화 교육은 주민

들이 복지사각지대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위기가구 발굴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수첩도 신규 제작·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소중한 마음과 노력을 바탕으로 민·관이 적극 협력해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광산구, 군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 개최

소음영향도 조사 불합리 지적

광주 광산구는 지난 26일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송정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신창동 등 8개동이 '소음대책지역'에 속해 있다. 지난 2022년부터 매년 2만 8000여명에게 약 80억원의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광산구는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내년에 예정된 2차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회의를 마련했다. 주민회의에 참여한 100여명의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군소음보상법의 기준인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군소음보상법이 거주지로 한정된 것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광산구



광산구는 지난 26일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회의를 열었다.

광주 광산구 제공

에 실제 거주하지만 직장이 다른 지역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이 감액되고, 광산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17년째 소음피해가 심한 광산구 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군소음보상을 위해 변동사항이 없어도 해마다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함

에 신청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원천적으로 군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주민 목소리를 국방부에 전달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복귀, 마을 카페·기념품점 등

광주 북구는 임동 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인 '임동 벚들마루' 건립 공사를 마치고 개관을 준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임동 벚들마루는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90㎡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주민 소통 거점시설이다.

1층에는 마을 카페와 기념품점, 2~3층에는 다목적홀과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관 등이 마련됐다.

내달 초까지 집기류 배치 등 준비를 마치고 내달 13일 정식 개관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 주민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5·18사적지' 지정 재추진 광산구, 송정역 광장 등

광주 광산구는 송정정 앞 광장·옛 송정경찰서에 대한 5·18사적지 지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송정역광장을 5·18사적지로 지정해 달라는 광산구의 요청을 반려했다. 토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의 전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송정역 앞 광장은 1980년 5월22일 시위 군중이 모였던 곳이다. 송정동에 위치한 옛 송정경찰서는 5·18 당시 민간인 여성들이 집단 구급된 장소다. 경찰서 청사는 지난 2005년 운수동으로 이전했다.

광산구는 올해 송정역 광장과 옛 송정경찰서에 대한 5·18사적지 지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에는 5·18 사적지가 29곳이 있지만 5개 자치구 중 광산구에는 한 곳도 없다. 광산구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사적지 지정 절차를 다시 준비한다.

김상철 기자

'어르신 효 음악회' 개최 북구, 내달 7일

광주 북구는 한국나눔연맹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 어르신 효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악회는 다음달 7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북구는 차상위계층과 보훈단체 활동, 경로당·복지관 이용자 등 지역 1000여명의 어르신을 초청해 트로트와 마술, 폼바, 국악 등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장 입장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초대권 확인 후 가능하다. 초대권 배부 등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정성현 기자